

* '91년 경제운용 방향

(90.12.21) 경제기획원

우리 경제의 좌표

- 내년 한 해는
 - 제6공화국이 후반 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
 -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하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'중요한 해'라고 생각함
- 제6공화국 들어와서 우리는 지난날의 권위주의적 경제운용 방식을 탈피하고 고도성장에서 과생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'경제민주화와 형평증진'에 역점을 두어 왔음
 - 그 결과 민간경제주체들의 자율이 신장되고 정부개입이 축소되었으며 근로계층을 포함한 보통사람들의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으나
 - 반면에 자기의 노력을 등한시하고 우리의 경제력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욕구가 표출됨에 따라 경제의 발전잠재력이 약화되고 대외경쟁력을 감퇴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하였음
-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부터 경제정책의 중점을, 약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데 두어 왔는 바
 - 이는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물가안정이 정착되고 수출증대를 통한 국제수지의 흑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으며
 -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속에서는 지속적이고 실

질적인 분배개선과 복지향상이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

- 금년에 이어 내년도 경제운용도 '제조업의 경쟁력 강화'를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
 - 우리 경제는 향후 2년안에 국제수지흑자 기조를 회복하고, 구조적 물가안정기반 위에서 성장과 형평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
 - 그 결과 제6공화국이 민주발전과 경제발전의 양토대 위에서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화의 기틀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함

I. '90년 경제운용 평가

- 금년초 우리 경제는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
 - 경제성장은 6.5% 수준으로 낮게 전망되었으며
 - 수출은 1/4분기중 1.2%의 감소를 나타내고
 -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었고 전·월세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물가도 월평균 1.2%의 높은 상승추세에 있었음
-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기업의 욕과 근로의욕을 소생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함
 - '4.4 경제활성화 종합대책'을 수립하여 기업의

육을 제고함으로써 수출과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고

- '4.13 및 5.18 부동산 투기억제대책'을 통하여 전계층에 확산되었던 투기현상을 진정시켜 왔으며
- '4.20 물가안정대책'을 수립함과 아울러 주요 품목의 수급대책도 추진하였음
- 하반기부터는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보완하여 '산업인력 수급대책' 및 '제조업의 자동화·정보화 추진방안'과 '과학 및 산업기술개발 기본방향'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

-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폐만사태로인한 고유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흐름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왔음

경제성장면에서는

- 9%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
- 성장내용면에서도 상반기에는 민간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위주의 성장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설비투자와 수출회복을 바탕으로 성장구조가 건실화되는 추세를 보임

국제수지면에서는

- 연간 경상수지 적자가 20억불로 예상되나
- 유가상승으로 인한 예상외의 추가부담을 감안할 때 유가 상승요인이 없었다면 흑자도 가능하였음

물가면에서는

- 상반기까지 월평균 1.2%의 높은 증가와 폐만사태에 따른 일부 유가조정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수 물가를 유지하였음(소비자 9.4%, 도매 7.4% 추정)
- 이와 함께 최근 토지 및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전·월세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가격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음

-이와 같이 우리 경제는 총량면에서의 개선과 더불어 경제운용면에서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틀이 점차 마련되어 가고 있음

- 그러나 사회간접시설의 부족·인력난·공장용지와 같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요인이 상존해 있고
- 최근 노사분규와 부동산투기 현상이 진정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아직도 경제안정기반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
- 형평과 분배에 관한 국민적 갈등이 남아 있다고 봄

총 합

- 금년은 경제민주화와 형평추구 과정에서 저하된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소생시키고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해라 평가할 수 있음
- 내년에도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경쟁력 약화요인을 제거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음

II. 내년도 대내외여건 전망

-내년도 대외여건을 보면

- 폐만사태에 따른 고유가현상은 밖으로는 세계 경기의 둔화를 초래하여 우리의 수출여건을 악화시키고 안으로는 에너지비용상승을 통한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것임
- UR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각국의 수입규제가 완화되어 우리의 수출확대에 유리한 면이 있으나 농업과 서비스분야의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이 있고 타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통상마찰이 가중될 우려가 큼
- 반면 대통령의 소련방문을 계기로 한 북방교류 증진은 새로운 시장개척 가능성을 높여 줄 것

이며 기존시장에서는 엔화의 강세현상 등이 우리의 수출환경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

-한편 대내적으로는

- 유가인상 및 공공요금 현실화에 따라 소득보상적 욕구가 표출되고 특히 지방자치제 선거의 실시로 경제·사회적 안정분위기가 이완될 경우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확산될 우려
- 노사관계 및 임금교섭여건도 정치·경제적 상황으로 보아 금년보다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

Ⅲ.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과 중점시책

기본방향

-이와 같은 대내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

- 금년에 이어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
-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면서
- 노동자와 농어민 그리고 기업인 등 모든 국민 계층이 정부를 신뢰하여 '열심히 일하려는 분위기'를 조성하는 데 두겠음

-이를 위해서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은

- 첫째, 제조업의 강화에 최우선을 두고
- 둘째,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소비생활의 확산을 통한 경제안정과 국내저축률의 제고
- 셋째,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어촌생활환경의 개선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주력
- 넷째,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두고자 함

1.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

-근래 우리나라 제조업은

○'87~'89년에 걸친 극심한 노사분규와 급속한 임금상승과 함께

○기술개발 및 구조조정이 부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

-특히 제조업의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되어 있음

○인력난과 고임금

· 제조업 임금상승률(% , '87~'90년 상)

한	국	일	본	대	만
78	14	52			

○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

· 제조업 차입금 평균이자율(%)

한국('89년)	일본('88년)	대만('89년)
13.6	5.1	9.4 ¹⁾

1) 연평균 Prime-rate 기준

○공장입지난과 높은 지가수준

· 공장부지 가격상승(80년=100)

'85년	'86년	'90년 3/4
164(141)	279(160)	422(185)

*()안은 '80=100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

- 사회간접시설 부족과 유통비용의 급속한 증가
-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금년도에 수립한 시책중 중장기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새로운 시책도 적극 개발하여 강력히 추진

〈사회간접시설의 확충〉

-내년 예산에 도로·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하여 금년 대비 35% 증가한 2조 5천억원을 책정하였음

○이에 더하여 극심한 수송애로구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조기에 애로를 해소하도록 하고

○이와 함께 향후 10년간('91~2000년)의 사회간접시설 투자수요를 정밀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효율적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겠음

-이를 위하여 정부는

○사회간접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의

조달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

- 사회간접시설 투자비용 중 소요가 급증하고 있는 토지보상비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음
- 전반적인 사회간접시설의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는 7차계획에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제시토록 하겠음

<산업인력수급의 원활화>

- 제조업분야의 인력난에 대처하여 정부가 이미 마련한 '7.6 산업인력수급대책'은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되
- 특히 매년 76만명에 달하는 고졸출신자 중 진학 및 실업고출신자를 제외한 20~30만명의 인력이 적절한 기능이나 직업훈련없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을 제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토록 함
- 공고 배출인력을 확대하고 기능 및 기술교육시설 투자를 확충
- 공업계 전문대학과 이공계 대학의 설립을 적극 유도하고, 전산고등학교·전자대학 등 특수학교 설립을 장려
- 특히 여성인력의 기능·기술분야 취업촉진을 위하여 여성의 공고 진학과 기능훈련사업을 적극 확대
- 이와 함께 정년퇴직인력과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정비하여 시간제 고용제도를 확산
- 또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인력 스카우트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분위기를 정착

<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>

- 매년 7% 수준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향후 10년간 약 3,700만평의 공장용지가 필요

할 것으로 추정

- 내년부터 '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'과 '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'을 시행하여
- 공장입지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겠음
- 이와 함께 지나치게 공영개발방식에 의존하는데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
- 이에 추가하여
- 경지와 산림보전지역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함에 이어서 시·도지사에 대한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객관적인 용도변경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
- 내륙지의 높은 지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호전된 해안의 매립·간척사업을 확대하여 공장용지로 활용하며
- 농어촌진흥공사가 개발중에 있는 농업용 간척·매립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가능한 한 공장용지로 전환토록 함

<기술개발의 촉진>

- 향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기술수준 여하에 달려 있고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음
- 따라서 자체 기술개발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
-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술협력 체제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임
- 먼저 자체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
- 자동화와 에너지절약기술 등 핵심원천기술을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학계 및 연구소와 관련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개발 협조체제를 마련
- 정밀가공·전자부품 등 27개 분야 225개 생산 기술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
- 한전·통신공사 등의 공공연구개발개원을 기

계·전자·정보통신 등 전략사업의 애로기술 타개에 중점 활용

- 한편,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엔지니어링회사를 적극 육성하고 기술정보유통체계를 구축

-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위를 극복하기 위하여

- 그들의 원천기술과 우리의 생산기술을 제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

- 이를 위하여 일본·독일 등 선진공업국은 물론 소련과도 기술교류를 적극 증진해 나가겠음

〈설비투자의 촉진〉

- 내년에도 자동화·정보화 투자 등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유인을 강화하고 자금지원을 확산토록 하겠음

- 세제면에서는

-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시행기간을 연장('90년말→'91년말)하고

- 첨단 및 자동화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하며 감가상각 耐用연수를 단축

- 금융면에서는

- 자동화·정보화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6,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조성하여 지원

- 총통화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제조업 분야의 정책금융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제조업 부문에 확대공급

- 산업금융채권을 금년의 2배 수준인 4조 3,500억원 발행하여 설비자금재원으로 활용

- 여신관리제도를 주력업종 및 첨단분야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계열기업의 제조업 설비투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보완

- 특히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보강

- 금년에는 중소제조업체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을 조성·지원하였음

- 내년에도 중소제조업체의 자동화·정보화투자 등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5천억원 수준의 자금을 조성·지원

- 중소기업체의 담보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자 담보취득 제한을 선별적으로 완화

- 제조업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촉진과 관련한 시책은 정부와 기업이 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되

- 기업은 14개 업종별로 '92년까지 추진할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

-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시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함

2. 경제안정과 국내저축률의 제고

- 내년에는 정치·경제·사회적 상황으로 미루어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재현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

-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유가상승 등의 원가상승요인을 흡수하도록 하면서

-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함

- 내년부터 통화관리는 물가안정을 뒷받침하면서 실물경제흐름을 건설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

- 통화당국이 연간 전망과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토록 하고

- 정부부문 통화는 세입내 세출원칙을 견지하여 중립적으로 운용하되 계절적 기복이 없도록 대응

- 특히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요인별로 대처하여

-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

- 노사 및 임금안정을 유도하면서

- 국민소비생활의 합리화와 국내저축률 제고에 주력

〈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지속적인 추진〉

- 연초까지 급상승하던 부동산가격은 대기업의 비

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,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진정되었고

○전·월세 가격도 다세대·다가구 주택건설확대로 하락되고 있음

내년에는 부동산가격을 더욱 안정시키기 위하여

○기수립한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

-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토록 하고 자진 매각분도 조속히 처분되도록 함

○내년도 주택 공급은 신도시아파트 건설은 차질이 없도록 하되

- 총주택건설물량은 45~50만호를 유지하여 자재 및 인력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
- 건설인력난에 대비하면서 건축비용 절감을 위한 조립형 주택공법(P.C)을 확대

○주택에 대한 가수요 억제를 위하여 주택보유 전산화작업을 추진

- 현재 1가구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, 신규아파트분양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으나
-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우선 6대도시와 경기도부터 주택보유현황 및 변동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

〈노사 및 임금안정 유도〉

임금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경제운용의 당면과제인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물가안정은 노사 및 임금 안정없이는 조성하기 곤란

○그러나 임금안정은 근로자들의 협력없이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며

○정부도 내년도 소비자물가를 한 자리수 이내에서 안정되도록 하되 특히 식료품비, 집세 등 근로자가게에 영향을 주는 물가를 안정시키는

데 주력

-이렇게 함으로써 내년도 기본임금이 한 자리수에서 안정되도록 유도하고 임금안정에 대응하여 근로자복지증진시책을 병행 추진

○상대적으로 보수수준이 높은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보수인상률을 5~7%선에서 책정되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임금안정을 선도

○공단주변의경지와 산림보전지역에 근로자용임대주택건설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가 일정기간 공동소유한 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주택건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근로자에 대한 야간대학 수강기회를 확대

○언론계, 학계, 노총, 경영계 등 사회지도층의 임금안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

〈소비생활의 합리화 유도과 국내 저축률의 제고〉

- '89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국내 저축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

(%)

	'86년	'87년	'88년	'89년	'90년
국내저축률	32.8	36.2	38.1	36.3	35.5
(민간소비증가율)	(8.0)	(8.3)	(9.8)	(9.8)	(10.0)

-먼저 과도한 소비증가억제를 유도하기 위하여

○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전 국민에 확산시켜 나가고

○소비성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세 및 여신관리를 강화

-고유가시대에 대응하여 에너지소비절약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

○유가체계와 전기요금의 구조를 개선하고

○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·보급에 주력하여 에너지절약을 생활화

-이와 함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저축에 대한 유인을 대폭 강화하겠음

- 모든 봉급생활자가 가입 가능한 비과세 장기저축제도를 신설
 - 금리는 정기예금보다 2~3% 높게 하고 월 30만원까지의 저축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되는 장기고수의 저축제도임
- 5%의 저율로 과세되는 세금우대가계저축제도의 확대(500만원→800만원)

3. 농어촌 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

(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개선)

-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
 - 농지구입자금 지원을 증액하여 영농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을 확충
 -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밭에 대한 생산기반 투자확대
 - 우리 실정에 맞는 영농기술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투자 확대
 - 통일벼는 생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품질위주의 생산에 주력
 - 통일벼 수매 : '90년 450만석→'91년 150만석
- 농산물 유통구조를 수급여건변화에 맞도록 개편하고 수급안정시책을 강화
 - 민간 유통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농축수산물 유통상의 규제 완화
 - 생산자(단체)의 유통참여를 확대하고 산지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강화
 - 수급조절기능강화를 위해 '농산물가격안정기금' 운용규모를 확대
- 농업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외소득원을 적극 개발
 - 농공지구 지정을 확대하여 농어촌 공업화를 촉진하고
 - 희망농가의 전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도

록 함

-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과 농어민에 대한 복지시책 확대
 -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주택개발사업을 적극 추진
 -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을 현행 실업계 고교 1, 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하고
 - 수입개방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실효성있는 농어민 복지시책을 적극 개발
- 농어촌 발전대책은 구체적 내용을 발전시켜 7차 계획의 부문계획으로 확정·추진

(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도시 저소득층 지원 강화)

- 대도시 교통난 완화, 맑은 물 및 맑은 공기 보전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실하게 추진
- '86년 이후 도시권의 인구증가규모가 전체 인구 증가를 상회함으로써
 - 교통·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음
 - 이에 따라 현행 도시권 정비 정책을 전면 재평가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음
-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
 - 생활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고
 -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자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
 - 저소득층 지원을 전담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대폭 증원 ('90년 324명→'91년 2,000명)

4. 국제화 추세에의 능동적 대응

- 국제경제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
 - UR협상타결에 대비하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

- 통합 EC 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럽진출을 적극 추진
- 아·태지역 협력관계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
- 국제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며 지역연구를 강화
- 미국 등 기존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응
- 양국간에 이미 약속된 개방사항은 차질없이 이행
- 불필요한 통상마찰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강화
- 대통령 방소를 계기로 대북방 경제·기술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
- 제2차 정부고위급 회담을 통해 소비재 등 교역 확대 방안 마련
- 교역·투자·자원개발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조정하기 위한 '한·소경제협력공동위'의 설치
- 첨단기술의 이전·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'한·소과학기술공동위' 및 '한·소원자력공동조정위'를 개최
- 남북경제교류의 실질적 확대를 위하여
- 남북경제협력공동기구의 조기 설치 추진
- '남북협력기금'을 활용하여 민간교역 활성화 지원

IV. 내년도 경제전망

- 경제성장면에서는
- 성장률이 7% 수준에 달하여 1인당 GNP가 6,200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
- 성장의 내용면에서도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보다 건실해 질 것으로 예상됨
- 한편 고용면에서도 실업률이 2.5% 수준으로 금년에 이어 매우 안정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

- 수출과 국제수지면에서는
- 금년에 추진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대북방 수출확대 등으로 수출은 금년대비 8% 수준 증가한 695억 불에 달할 전망
- 이에 따라 국제수지는 원유대전(原油代錢)의 추가부담요인이 있으나 적자규모가 GNP의 1% 수준인 30억불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
- 물가면에서도
- 유가 및 공공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나
- 임금안정과 소비절약 기풍이 진작될 경우 한 자리수 물가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

결 론

- 내년도 경제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유가상승과 UR협상 등 대외여건의 변화와 연이은 선거일정 및 노사관계의 불안으로 안정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됨
- 따라서 경제팀은 더욱 결속하여 이상의 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음
- 이렇게 하여 기업인들은 적극적으로 투자욕을 갖고 기술혁신과 신시장 개척에 주력하고
- 농어민과 근로자들도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려는 근로의욕을 되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음
- 내년에 지방자치제 선거를 비롯 정치안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상의 경제시책을 잘 추진해 나가면
- 우리 경제는 향후 2년 안에 물가안정과 국제수지흑자 기조가 정착되는 건실한 경제가 실현될 것이며
- 이와 같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확신함